

2007. 3. 18. 시행 법원 9급 공채 제1·2차시험 확정정답

● 법원사무직렬 < ②책형 >

헌 법		국 어		한국사		영 어		민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③	1	②	1	③	1	②	1	④	1	②	1	③	1	②
2	③	2	③	2	③	2	②	2	①	2	②	2	③	2	②
3	③	3	③	3	④	3	②	3	③	3	④	3	④	3	③
4	②	4	②	4	③	4	③	4	③	4	①	4	①	4	③
5	④	5	③	5	②	5	③	5	③	5	②	5	③	5	③
6	③	6	④	6	①	6	②	6	③	6	②	6	①	6	②
7	③	7	①	7	④	7	④	7	④	7	④	7	②	7	④
8	②	8	④	8	②	8	①	8	②	8	④	8	③	8	③
9	④	9	③	9	④	9	④	9	③	9	②	9	④	9	④
10	①	10	②	10	②	10	①	10	①	10	④	10	③	10	②
11	④	11	②	11	④	11	②	11	④	11	②	11	②	11	③
12	②	12	①	12	④	12	④	12	④	12	③	12	③	12	①
13	④	13	①	13	③	13	③	13	①	13	①	13	④	13	④
14	③	14	④	14	①	14	③	14	④	14	④	14	④	14	③
15	①	15	③	15	①	15	③	15	③	15	①	15	③	15	②
16	②	16	②	16	③	16	③	16	①	16	③	16	④	16	④
17	②	17	①	17	①	17	①	17	④	17	②	17	③	17	③
18	④	18	①	18	③	18	④	18	④	18	③	18	④	18	②
19	③	19	④	19	③	19	④	19	②	19	④	19	②	19	③
20	③	20	③	20	②	20	④	20	②	20	③	20	③	20	①
21	②	21	③	21	①	21	①	21	①	21	②	21	③	21	②
22	①	22	③	22	①	22	②	22	②	22	②	22	③	22	①
23	①	23	①	23	④	23	②	23	②	23	③	23	②	23	④
24	③	24	①	24	④	24	④	24	④	24	④	24	①	24	④
25	②	25	④	25	②	25	②	25	④	25	③	25	①	25	①

2007. 3. 18. 시행 법원 9급 공채 제1·2차시험 확정정답

● 등기사무직렬 < ②책형 >

헌 법		국 어		한국사		영 어		민 법		민사소송법		상 법		부동산등기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③	1	②	1	③	1	②	1	④	1	②	1	①	1	①
2	③	2	③	2	③	2	②	2	①	2	②	2	①	2	①
3	③	3	③	3	④	3	②	3	③	3	④	3	③	3	③
4	②	4	②	4	③	4	③	4	③	4	①	4	①	4	③
5	④	5	③	5	②	5	③	5	③	5	②	5	④	5	①
6	③	6	④	6	①	6	②	6	③	6	②	6	①	6	④
7	③	7	①	7	④	7	④	7	④	7	④	7	②	7	④
8	②	8	④	8	②	8	①	8	②	8	④	8	①	8	①
9	④	9	③	9	④	9	④	9	③	9	②	9	①	9	②
10	①	10	②	10	②	10	①	10	①	10	④	10	④	10	③
11	④	11	②	11	④	11	②	11	④	11	②	11	④	11	②
12	②	12	①	12	④	12	④	12	④	12	③	12	①	12	④
13	④	13	①	13	③	13	③	13	①	13	①	13	③	13	④
14	③	14	④	14	①	14	③	14	④	14	④	14	②	14	②
15	①	15	③	15	①	15	③	15	③	15	①	15	②	15	④
16	②	16	②	16	③	16	③	16	①	16	③	16	③,④	16	④
17	②	17	①	17	①	17	①	17	④	17	②	17	③	17	③
18	④	18	①	18	③	18	④	18	④	18	③	18	②	18	②
19	③	19	④	19	③	19	④	19	②	19	④	19	③	19	①
20	③	20	③	20	②	20	④	20	②	20	③	20	④	20	②
21	②	21	③	21	①	21	①	21	①	21	②	21	②	21	①
22	①	22	③	22	①	22	②	22	②	22	②	22	①	22	①
23	①	23	①	23	④	23	②	23	②	23	③	23	③	23	④
24	③	24	①	24	④	24	④	24	④	24	④	24	①	24	④
25	②	25	④	25	②	25	②	25	④	25	③	25	①	25	①

2007년 3월 18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제 1 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헌 법(25문)	국 어(25문)
	한국사(25문)	영 어(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7. 3. 19.(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7. 3. 19.(월) 10:00 ~ 2007. 3. 22.(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3. 30.(금)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헌 법 25문】

【문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문 2】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1980년 우리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 ②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법률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 ④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문 3】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②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다.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문 5】 다음 중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 ㉣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 ① ㉠㉡
- ② ㉠㉢
- ③ ㉠㉣
- ④ ㉠㉢㉣

【문 6】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였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 ③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 폐단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 ④ 제8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문 7】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②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선거관계법의 일부 조항이 사후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된 선거의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된다.
- ④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이고도 확실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문 8】 재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③ 3심제도는 헌법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2심제로 할 수 있다.
- ④ 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문 9】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 ② 간통죄의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문10】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본다.
- ③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문11】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 ③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권
- ④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문12】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문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알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
- ④ 외국인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문14】 우리 헌법조문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 ① 직업선택의 자유
- ② 양심의 자유
- ③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④ 행복추구권

【문15】 다음 중 헌법에 경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③ 소비자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문1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평등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감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

【문17】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18】 다음 중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무죄추정의 원칙
-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 진술거부권
-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① ㉠㉡㉢㉣
- ② ㉠㉡㉣㉤
- ③ ㉠㉢㉣㉤
- ④ ㉠㉡㉢㉣㉤

【문19】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에게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문21】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②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③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22】 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
- 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 ③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 ④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문23】 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③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④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문24】 다음 중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전체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였다.

【문2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 어 25문】

【문 1】 다음의 글에서 밑줄 친 ㉠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고서(古書)와 고화(古畵)를 통해 고인과 더불어 대화 하면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 손때로 곁은 먹 너머에 생각의 보금 자리 속에 고이 깃들이고 싶어서다.

사실, 해묵은 서화(書畵)에 담긴 사연을 더듬는다는 그 마련부터가 대단히 즐겁고 값진 일이니, 비록 서화에 ㉠손방인 나라 할 지라도 적잖은 반기가 끼쳐짐에서다.

- ① 무뢰한 ② 문외한 ③ 전문가 ④ 호사가

【문 2】 다음 글에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말이 ㉡말을 하는 이상한 나라.
- ㉢밭에 ㉣밭을 구워 먹었다.
- ㉤사과(謝過)의 뜻으로 ㉥사과(沙果)를 하나 주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문 3】 다음에서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뭄-가물
② 고까-꼬까-때때
③ 팡주리-팡우리
④ 삼살개-삼사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4 - 5】

[가]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나]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문 4】 다음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어, 서술어 ② 관형어, 부사어
③ 목적어, 보어 ④ 독립어

【문 5】 다음 글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할아버지께서 설에 동생에게 인형을 주셨다.

- ① 한 자리 ② 두 자리
③ 세 자리 ④ 네 자리

【문 6】 맞춤법에 오류가 없는 것은?

- ① 뭇돈 마련에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
② 관리는 신선노름, 서민은 주름살
③ 증권사들 1월 장미빛 전망 빛나가
④ 은행, 부자엔 후하고 빈자엔 켜켜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7 - 8】

[가] 구름 비치 조타 흐나 검기물 즈로 혼다.
 벼람 소리 뭍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론인가 흐노라.

[나] 고즌 무스 일로 꿔며서 쉬이 디고,
 플은 어이햐야 푸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흐노라.

[다] 더우면 곳 꿔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얻디 눈서리를 모른다.
 九泉(구천)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햐야 아노라.

[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뵈연는다.
 더러코 四時(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하햐노라.

【문 7】 이 노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여 강한 호소력을 얻고 있다.
③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정서를 점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④ 개인의 정서 표출보다 집단의 정서를 주로 노래하고 있다.

【문 8】 [가]~[라] 중 노래의 대상이 아래 글과 같은 것은?

흙을 밀고 생겨난 죽순적 뜻을 그대로
무엇에도 개의찮고 호올로 푸르리
구름송이 스쳐가는 창궁(蒼穹)을 향하야
오로지 마음을 다하는 이 청림의 대는
노란 주둥이 새 새끼 굴러들 듯 날러 앉으면
당장에 한거루 수묵(水墨)이 향그론 그림이 되고
푸른 달빛과 소슬한 바람이 여기 잠기며
다시 찾을 수 없는 유현(幽玄)한 죽림의 일원이 되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 9】 다음 한자성어를 속담으로 표현해 보았다.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目不識丁 :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② 十伐之木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③ 走馬看山 : 달리는 말에 채찍질
④ 矯角殺牛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0 - 12】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기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한다.

어찌하여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한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 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적이 많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 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여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짐작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 나라에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날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오늘월에도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 오기는 어려우리라.

【문10】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나라에는 인재가 드물게 난다.
- ② 오랑캐 출신의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
- ③ 이름 없이 살다가는 인재가 많이 있다.
- ④ 하늘은 인재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고루 내린다.

【문11】 ㉠의 문맥적 의미와 통하는 한자 성어는?

- ① 進退維谷 ② 二律背反
- ③ 朝令暮改 ④ 炎涼世態

【문12】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어디 있느냐?
- ②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 ③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더냐?
- ④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3 - 15】

[가]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으리.

[나] 公無渡河 임은 강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그에 강을 건너시다가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임을 어찌할거나.

[다] 생사(生死)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문13】 [가]~[다]의 대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나] 노동요, [다] 의식요
- ② [가] 소망과 기원, [나] 슬픔, [다] 추모
- ③ [가] 집단적인 노래, [나]·[다] 개인적인 노래
- ④ [가] 명령과 위협, [나] 독백과 탄탄, [다] 다짐과 기원

【문14】 다음 중 발상과 표현이 [가]와 유사한 것은?

- ① 철호야! 나 좀 도와 줘, 빵 사 줄게.
- ② 애야! 그 쪽은 안돼, 왼쪽으로 가야지.
- ③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 ④ 이봐! 빨리 보내. 안 보내? 당신하고 거래 끊을 거야.

【문15】 ㉠~㉣의 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 : ‘우두머리’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 :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가 들어 있다.
- ③ ㉢ : 지은이 자신을 가리킨다.
- ④ ㉣ : ‘같은 부모’를 뜻한다.

【문16】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신체부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그네들이 자기 뒤통수에 먹일 쭉떡감자에 지레 오금부터 저리고 마는 것이었다.
- ② 상인이 별안간 노비 앞으로 달려들어 오지랖을 움켜쥐더니 아래로 주욱 훑어버렸다.
- ③ 그 때문에 분이 꼭뒀까지 오른 안주인한테 머리채를 꺼들려 방바닥에 함부로 나뒹굴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 ④ 한적한 소재지 한복판에 가해진 완장의 충격은 이를테면 잔잔한 수면을 퐁퐁퐁 꿰뚫는 물수제비의 파문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문17】 <보기 1>의 자유롭게 쓴 글감을 토대로 <보기 2>의 개요를 짤 때 글감을 잘못 이용한 것은?

<보기 1>	<보기 2>
㉠ 2004년부터 매년 물 부족	제목 : 댐 건설
㉡ 여름 장마 강수량 70% 집중 → 물 확보해야	주제문 : 환경 파괴..... 물 절약으로 극복
㉢ 물 수요 증가	개요
㉣ 시화호, 낙동강, 팔당댐 오염 -부영양화, 녹조현상	서론 :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댐 건설 찬 반론
㉤ 댐 많아졌어도 가뭄, 홍수 피해는 더 커짐	본론 1 : 댐 건설 찬성론
㉥ 자연생태계 파괴, 역사 문화 유산 수장됨	본론 2 : 댐 건설 반대론 1) 댐 건설 찬성 이 유를 반박
㉦ 댐 해체가 세계적인 추세-미 국, 스웨덴 등	2) 댐의 폐해
㉧ 건설한 댐 유지 관리비→애 물단지로 전략	본론 3 : 물 부족 해결책
㉨ 물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 로 줄이기	결론 : 요약 및 강조
㉩ ‘물쓰듯 한다’는 속담 인용- 국민 의식 각성 필요	
㉪ 물 수요 관리하는 정책으로	

- ① ㉡, ㉢, ㉦을 본론 1의 이유로 내세운다.
- ② ㉤을 본론 2 - 1)의 자료로 제시한다.
- ③ ㉢, ㉤, ㉦을 본론 2 - 2)의 자료로 제시한다.
- ④ ㉨, ㉩, ㉪을 본론 3의 세부내용으로 제시한다.

【문18】 아래의 ㉠ ~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형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업어 키우셨다.
㉡ 나는 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은사님을 뵈었다.
㉢ 할머니, 아빠가 방금 들어왔어요.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객체 ㉡-주체 ㉢-상대
- ③ ㉠-상대 ㉡-객체 ㉢-주체
- ④ ㉠-상대 ㉡-주체 ㉢-객체

【문19】 다음 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田]을 보 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벼를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③ 선례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 ④ 대조와 역설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20】 다음 밑줄 친 각 단어의 쓰임이 문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출근은 지하철 사용을 권장한다.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이용을 금지한다.
- ② 그 나라에서는 낙태를 입법화하였다.
공무원 윤리 규정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 ③ 교통신호 체계만 바꾸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 ④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것을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매년 많은 흡연자들의 새해 목표가 금연인 것을 보면 금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1 - 22】

“우린 뒷 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예요. 본명은요.....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흠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췌,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다구.”
“뭇뻘예요?”
“넌들 아나, 뭇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뭇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뭇에 쓰요.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뻘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문2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서술자의 눈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사물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제공하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적 심리를 보충하고 있다.

【문22】 밑줄 친 ㉠에 나타난 ‘노인’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 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이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②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 ③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들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 ④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례자식들이
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문23】 다음 글의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고기를 뀨(구워) 먹는다.” “밥을 뽉아(볶아) 먹는다.” “쏘주(소주)를 찢(진)하게 한 잔 한다.”라고들 한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고 나아가 표기까지 하는 현상은 어감을 크고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언중들의 의도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회귀현상도 일어나 원래 된소리인 ‘두껍’을 의식적으로 예사소리로 착각해서 ‘두껍’이라고 잘못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우스운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 ① 애긔은(←애긔은) 사람을 잡아 가두다.
- ② 나는 이 집에 눈곱(←눈뽍)만큼의 미련도 없다.
- ③ 어머니는 뽉배기(←뽉뽍기)를 마룻바닥에 놓고 앉았다.
- ④ 근무 전후의 자투리(←짜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4 - 25】

21세기 지식 문화 사회의 핵심 역량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능력’이다.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는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교환된다. 이른바 ‘문화기술’이 지배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산업화에 뒤져 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지식 사회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한글이다.

한글의 장점은 우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근대산업국가로 단기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보급, 즉 문맹 퇴치에 따라 정보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덕분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선언문에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날마다 쓰는 데 편안케 하고자 한다.”고 밝힌 의도에 걸맞게, 한글은 정보 대중화에 아주 적당한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이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공로상을 ‘세종대왕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정보 대중화가 한글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한글의 첫 번째 강점은 한글이 지니는 두 번째 강점, 즉 ‘정보화에 유리한’ 문자 체계라는 점과 연결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을 더욱 빛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자국 언어를 정보화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 없이 크다.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한 한 원인으로 타자기를 활용한 알파벳과의 정보전에서 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계식 타자기에 입력이 용이한 음소 문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쉽게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중국어, 일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 대중화 능력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글 정보화의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20세기 후반까지 한글 기계화는 몇 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타자기 표준 자판 논쟁’(2벌식이나 4벌식이나 등을 놓고 벌어짐)이나 ‘한글 풀어쓰기 논쟁’(초성, 중성, 종성을 나란히 늘어쓰자는 것) 등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표한다. 그런데 이 같은 타자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문제들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한글 창제 당시부터 이미 표기 원리에 내재되어 있던 ‘한글 오토마타’(한글의 초성과 종성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규칙)의 원리 덕분에 한글 컴퓨터 자판은 지금과 같은 2벌식으로 정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딴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에 ‘가획(加劃, ㄱ에서 획수를 더하면 ㅋ과 ㆁ이 됨)’이나 ‘천지인’과 같은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는 현재 휴대폰의 자판 입력 방식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일본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알파벳 자판보다 더 우수한 원리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정보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음과 모음의 자판이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10개의 자판만으로도 손쉽게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기반한 시장 영역을 점점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이나 DMB 기기를 통한 정보의 생산과 교환 활동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임이나 영상물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통한 정보 교환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다중 접속온라인 게임이나 VOD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형태가 그 예다.

앞으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도 예상된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배우기 쉽고 정보화에 유리한’ 한글의 강점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한글창제 560돌을 맞는 오늘, 시대를 앞서간 세종의 철학과 언어학적 비범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문24】 위 글에 제목을 붙이자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시대에 더 빛나는 한글
- ② 이젠 한글표기법 독립운동할 때
- ③ 한글의 표기능력 확충을 위해
- ④ 한글로 세계문명을 바꾸자

【문25】 위 글로 미루어 보아 한글 창제의 원리로 맞지 않은 것은?

- ① 상형(象形)의 원리 ② 가획(加劃)의 원리
- ③ 합용(合用)의 원리 ④ 표의(表意)의 원리

【한국사 25문】

【문 1】 다음은 일제의 한인 총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목격한 선교사의 증언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용정촌에서 40리 가량 떨어져 있는 한 마을은 왜군이 야간에 습격하여 청년을 모조리 죽였으니 밤마다 죽는 사람이 2, 3명씩 되었다. 이는 1920년 10월의 일이다. 당시의 참사를 현지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월 31일, 연기가 자욱하게 낀 찬랍파위(贊拉巴威) 마을에 가 보았다.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일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때려 죽이고 (후략)

<조지훈, 『한국 민족 운동사』>

- ① 천마산대의 활동으로 한만 국경지대의 치안 행정이 마비되었다.
- ② 중국 신문이 이봉창 의거를 애석하다며 대서특필했다.
- ③ 일본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에서 대패했다.
- ④ 구월산대가 일제 관리와 밀정을 차단하였다.

【문 2】 황현이 다음의 절명시를 쓰고 자결한 까닭은?

난리가 물밀듯 거둑 몰아닥쳐 머리는 세고 나이는 늙어 버렸네
몇 번이나 죽으려 했건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어떻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오늘
가물거리는 초불만이 푸른 하늘을 비추네
(후략)

- ① 일제가 대한제국의 순종을 강압적으로 퇴위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 ② 일제가 대한제국의 고종을 강압적으로 퇴위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 ③ 일제가 조선과 함병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 ④ 일제가 조선과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문 3】 신간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간회 본부가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주장하는 등 우경화 경향을 보이자 해소론이 등장하였다.
- ② 일제와의 비타협을 원칙으로 민족의 반일역량이 총결집한 항일단체였다.
- ③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지원활동을 하였다.
- ④ 신간회 본부는 주로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문 4】 다음에서 기술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세력은 이 나라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건국신화도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출도는 왕이 지배하는 지역과 함께 5부를 이루었다.

- 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지냈다.
-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③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④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변상하게 하였다.

【문 5】 다음 인물들의 활약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ㄱ.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였고,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ㄴ. “지눌”은 정혜쌍수, 즉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을 주장하였다.
- ㄷ.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면서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ㄹ. “요세”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6】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인조반정 이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다.

- ① 주자 중심의 성리학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 하는 자를 사문난적으로 몰았다.
- ②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 ③ 6경과 제자백가에 관심을 두는 학자가 나타났다.
- ④ 예학이 발달했다.

【문 7】 경세치용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약용은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② 유흥원은 일생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 ③ 농촌 문제의 해결을 지주층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토지의 경작자인 농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 ④ 박지원은 영농 방법의 혁신과 상업적 농업을 장려했다.

【문 8】 19세기 서북지역에서 반봉건항쟁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중앙의 간섭 때문이었다.
- ②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족층의 수탈 때문이었다.
- ③ 백성에 대한 수령의 지나친 수탈 때문이었다.
- ④ 서북민에 대한 지역적 차별 때문이었다.

【문 9】 다음 자료는 무엇과 관련된 설명인가?

일반 교역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지주제의 확대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발달하였다. 삼남 지방에서는 재난과 기근으로 물자의 교역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 ① 시진
- ② 방납
- ③ 보부상
- ④ 장시

【문10】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큰 짐승 대신에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활을 사용하였다.
- ② 선돌을 세워 거석을 숭배하였다.
- ③ 이전보다 더욱 작게 만들어진 잔석기를 사용하였다.
- ④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었다.

【문11】 다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신라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① 선종 불교가 확산되었다.
- ②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이 들어와 유행하였다.
- ③ 일부 도당 유학생 출신의 6두품 세력이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였다.
- ④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고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문12】 다음은 고려의 민족 재통일기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고려는 내분에 휩싸여 있던 후백제를 정벌하였다.
 (나) 신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내세우던 고려는 결국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하였다.
 (다) 귀족들의 권력 투쟁으로 국력이 크게 쇠퇴한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 ① (가)-(나)-(다) ② (가)-(다)-(나)
- ③ (나)-(가)-(다) ④ (다)-(나)-(가)

【문13】 고려 시대 몽고와의 항쟁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종 때에는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이룩한 재조대장경은 목판이 8만 장이 넘어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 ①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② 별무반은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기를 들고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 ③ 두 차례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 ④ 개경에 나성을 쌓고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몽고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문14】 (가)의 식민 통치 시기에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무단 통치 (1910-1919)	→ (가) →	민족 말살 통치 (1931-1945)
----------------------	---------	-------------------------

- ①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의병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 ③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신민회가 결성되었다.
- ④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문15】 조선 초기의 지방 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 ②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 ③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였다.
- ④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문16】 다음은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된 것은?

가.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다. 생존권 투쟁을 외치던 YH무역 여성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라. 직선제 개헌과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6월 항쟁이 일어났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 ③ 나-가-다-라 ④ 나-다-라-가

【문17】 삼국의 문화는 일본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고구려는 일본에 종이와 먹의 제조방법 등을 전파하였다.
- ② 삼국시대의 문화 전파는 일본에 하쿠호 문화를 성립시켰다.
- ③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도 생겼다.
- ④ 신라는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문18】 다음 글을 읽고 고려시대 통치기구의 특징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는 함께 대간으로 불렸는데, 대간은 간쟁, 봉박, 서경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체제였다.
- ② 고려시대 정치의 귀족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③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
- ④ 지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19】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882년 6월이 되자 구식 군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겨우 받은 한 달치 월급에 겨와 모래가 절반 이상 섞여 있자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도시 하층민까지 가담하면서 군란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들은 일부 고관과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 ① 유길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정확한 성리학을 지키고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해야 한다는 사상이 배경이 되었다.
- ③ 청이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간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정부는 국왕의 군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하여 5군영을 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20】 다음 주장과 관련 깊은 개혁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 폐지,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 혁파
(나)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다) 탐관 오리 엄징, 노비 문서 소각, 과부의 재가 허용, 토지의 평균 분작

- ① (가)-(나)-(다)의 순서대로 개혁이 전개되었다.
- ② (가) 개혁이 실패한 후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나) 개혁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
- ④ (다) 개혁 과정에서 전라도 일대에 일종의 농민 자치 조직인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문21】 다음과 같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 알맞은 것은?

고조선은 중국과의 빈번한 교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① 명도전 ② 호우명 그릇 ③ 칠지도 ④ 임신서기석

【문2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닉슨 독트린 선언 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등 공산권과 화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주한 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으며, 남북 교차 승인안을 제시하는 등 북한과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처럼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해 왔던 박정희 정부의 기반은 약화되었다. 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 제7대 대통령 선거와 그 후에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높아졌다. (후략)

- ①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
- ② 장면 내각의 탄생 배경
- ③ 박정희 개헌안 통과 배경
- ④ 베트남 파병 결정 배경

【문23】 다음 자료가 풍자하는 시대의 향촌 양반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양반 : 나는 사대부의 자손인데.
선비 : 아니, 나는 팔대부의 자손인데.
양반 :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 아니, 양반이라는 게 팔대부도 몰라?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뭐.
...
양반 : 첫째, 지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네.
선비 : 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도 읽었네.
양반 : 도대체 팔서육경이 뭐냐?
초랭이 : 나도 아는 육경, 그걸 몰라?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 안경, 처녀 월경, 약국 길경(도라지), 머슴 새경(품앗).
〈하회 탈춤 대사〉

- ①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시행하였다.
- ② 문증을 중심으로 서원을 많이 세웠다.
- ③ 가문에 이름 있는 선조나 훌륭한 인물을 모셔 제사 지내는 곳인 사우를 많이 세웠다.
- ④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문24】 조선 후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을 겪는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작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 ①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고, 직역이 세습되었다.
- ② 신랑역천으로 양인 중에서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었다.
- ③ 재산으로 취득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 ④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증서라고도 불리었다.

【문25】 다음 왕권 강화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신라 신문왕 시기 : (가)
· 고려 광종 시기 : (나)
· 조선 태종 시기 : (다)
· 조선 흥선 대원군 시기 : (라)

- ① (가) -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 ② (나) -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다) - 도첩제를 폐지하여 일체의 출가를 금지하였고, 승과 제도를 폐지하였다.
- ④ (라) -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리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영 어 25문】

【문 1】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은?

The cockroach has been around for about 350 million years. ①Found almost everywhere, it is a survivor of the dinosaur age. One reason that roaches have lasted so long is ②why they are very fast and are able to elude enemies easily. Also, very few animals like to eat them because when ③attacked they give off a terrible odor. If necessary, many of them can fly to save themselves. Not only ④have roaches been around a long time, but chances are that they'll be on earth even after people are gone.

【문 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United States, about 160 million tons of garbage were produced this year. Ten percent was recycled, ten percent was burned, and the rest was put in landfills. But finding land for landfills is becoming more difficult.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cycle the garbage they produce. The U.S.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ing by ten percent next year. If the total amount of garbage is same, the amount of recycled garbage will be _____.

- | | |
|-------------------|--------------------|
| ① 16 million tons | ② 32 million tons |
| ③ 48 million tons | ④ 128 million tons |

【문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hild who stays up too late is often too tired to be successful in school. A child who is allowed to eat anything he wishes may have bad teeth and even suffer from malnutrition. Children who are rude and disorderly often suffer pangs of guilt. Children _____ are happy children. They blossom in an atmosphere where they know exactly what is expected of them. This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order, a feeling of security.

- | | |
|-------------------------------|------------------------------|
| ① with many talents | ② who are disciplined |
| ③ who live with their parents | ④ born into a wealthy family |

【문 4】 다음은 사전에 제시된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 to see and notice : *Did you _____ anything unusual in his behavior?*
2. to act in accordance with (law, custom, etc.) : *You should _____ speed limit while driving.*
3. to make a remark; say : *"That's odd," he _____d.*

- | | | | |
|-----------|-----------|-----------|-----------|
| ① reserve | ② advance | ③ observe | ④ receive |
|-----------|-----------|-----------|-----------|

【문 5】 빈 칸 (A), (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sects and animals are nearly always busy ; preparing for winter, getting ready for spring, cleaning their nests, feeding their young and doing the things that animals and insects do. They are a hundred percent alive and (A) . They also appear to be particularly content. We can learn from animals. To be happy we need to be (B) . When we let things slide, it costs us. Things don't improve where we neglect them.

- | | |
|----------------|-----------------|
| ① (A) involved | (B) industrial |
| ② (A) evolved | (B) industrial |
| ③ (A) involved | (B) industrious |
| ④ (A) evolved | (B) industrious |

【문 6】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 칸 (A), (B)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으로 짝지은 것은?

The dolphin has an echo system that works while it sleeps. This system sends out clicking sounds every 15 or 20 seconds. The sounds bounce back from anything in the water and tell the dolphin what is nearby. Some dolphins (A) open and close their eyes while they sleep. They may do this to watch for enemies in the open sea. Of course, the clever dolphins may also just be watching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em. But the dolphin's restless way of sleeping lets it breathe and (B) .

- | | |
|-------------------------|-------------------|
| ① (A) have been seen to | (B) keep it safe |
| ② (A) have been seen to | (B) keeps it safe |
| ③ (A) have been seen | (B) keep it safe |
| ④ (A) have been seen | (B) keeps it safe |

【문 7】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rtoons in the West have been associated with political and social matters for many years.

(A) In this way, the modern cartoon has become a very powerful force in influencing peopl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 In wartime, for example, they proved to be an excellent way of spreading propaganda.

(C) Nowadays cartoons are often used to make short, sharp comments on politics and government as well as on a variety of social matters.

- | | |
|---------------|---------------|
| ① (A)-(C)-(B) | ② (B)-(A)-(C) |
| ③ (C)-(A)-(B) | ④ (B)-(C)-(A) |

【문 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ccording to a study, people isolated from others had death rates two to three times higher than people with families and friends. The stronger the social ties to others, the lower the death rate. This is true for men and women, young and old, rich and poor. It also applies to people with different lifestyles. Cigarette smokers who had friends lived longer than friendless smokers. Joggers involved with other people lived longer than joggers who lived isolated lives.

- ① Importance of Social Ties
- ② How to Live Longer
- ③ Lifestyle of Isolated People
- ④ How to Contact with Others

【문 9】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and your partner have got into an argument. You are both upset and, in the heat of the argument, start making personal attacks you don't really mean. What's the best thing to do? The commonest answers are : to apologize, go silent, or stop for a moment and state your side of argument as calmly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experts, however, the best thing is to take a twenty minute break and then continue the conversation. Once both people have been given some time to calm down, a more amicable discussion can be expected.

- ① to compliment ② to appreciate
- ③ to inform ④ to advise

【문10】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 ① I could not help pitying him.
- ② World War II has broken in 1939.
- ③ We are looking forward for you to come.
- ④ We used to going swimming in the lake.

【문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Child sexual abuse ①has been reported up to 80,000 times a year, but the number of unreported instances ②are far greater, because the children are afraid ③to tell anyone what has happened, and legal procedure for validating an episode is difficult. The problem should be identified, the abuse stopped, and the child should receive professional help. The long-term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amage of sexual abuse can be ④devastating to the child.

【문12】 아래에 주어진 사전 뜻풀이 가운데 밑줄 친 relief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y were so little trained that they could not distinguish an object in relief from one in a picture.

relief *n.* 1. help for people in trouble : They've started a relief fund for the refugees. 2. a part of one's income on which one does not have to pay for some special reason : He gets tax relief because he supports his mother. 3. a person or group taking from another the responsibility for a duty : The Yankees are bringing in their relief pitcher. 4. a shape or decoration cut so that it sticks out above the rest of the surface it is on, as on a coin : a carving in low relief.

- ① 1 ② 2 ③ 3 ④ 4

【문1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be given the sack" is _____. This expression dates back to the day when craftsmen, tradesmen and labourers would travel from place to place, sometimes working on a project for only a few days and at other times for many years. Long before toolboxes, these workers would carry the tools of their trade around in a large sack, which would be given to their employer for safe keeping and then returned when their services were no longer needed. To be given the sack was to be given the means to carry their tools to another place of work.

- ① to receive some extra money
- ② to prepare for rainy days
- ③ to be discharged from duty
- ④ to be fired without payment

【문14】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ever I'm disappointed with my spot in life, I stop and think about little Jamie Scott. Jamie was trying out for a part in a school play. His mother told me that he had his heart set on being in it, though she feared he would not be chosen. On the day the parts were announced, I went with her to collect him after school. Jamie rushed up to her, eyes shining with pride and excitement. "Guess what, Mum," he shouted, and then said those words that remain a lesson to me : "I've been chosen to clap and cheer."

- ① 주연급 배우로 뽑혔다.
- ② 무대 연기를 아주 잘 했다.
- ③ 배역을 얻지 못했다.
- ④ 단역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문15】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에 어긋나는 것은?

Many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①take a summer job. Summer jobs ②are seen as good ways to get work experience, earn some money, and ③becoming more familiar with the realities of the world outside of school and family. Common jobs for inexperienced high school students ④include working as a salesperson in a shop.

【문16】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When riding on buses, trains, and other public transportation, speak in a quiet or normal conversational tone, and try to avoid extended phone conversations. Loud, animated conversations can annoy others. Keep your wireless ringer as low as practical to avoid disturbing others. Keep your phone close and easily accessible if you're expecting an important call. If you must take an important phone call but are in a(n) _____ surrounding, such as during lectures, and concerts, set the phone to vibrate mode and answer the phone only after leaving the room.

- ① proper ② beneficial
③ inappropriate ④ clumsy

【문17】 다음 밑줄 친 것 중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I remember the time my roommate, Ellen, got really mad at me. It was cold that morning, and I borrowed a sweater from her. By lunchtime ①it was warm, so I took ②the sweater off. I forgot about the sweater and left it in the cafeteria. When I went back to get it, ③it was gone. Ellen was angry with me. The sweater had been ④ a gift from an old friend of hers. Ellen was so angry and upset that she didn't speak to me for a week.

【문18】 다음 밑줄 친 문장 중 글의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Modern man has lived on the Earth for only 35,000 years, but we have changed our planet in many ways in that time. ①Many of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are good, but many more are not good for the Earth. ②We have created traffic pollution, global warming, and acid rain. ③These problems are very serious for our future. ④In Europe, we can find a slightly different way to control automobiles. But we can do something now! In many places, people have already taken ac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

【문19】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tection devices such as tiny microphones, laser sensors, video cameras, and so on, also make electronic surveillance possible in the workplace.

- (A) The receptionist, who said she was helping company sales by being friendly to customers, sued her employer in a court of law.
- (B) The new monitoring system, which checked on workers' speed and performance, recorded that she was spending about nine minutes "too long" with each visitor or caller.
- (C) She complained that electronic surveillance at work not only causes unnecessary stress but also invades people's privacy.
- (D) In one case, a receptionist with a perfect fourteen-year employment record lost her job because of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ompany's computer system.

- ① (C)-(A)-(B)-(D) ② (C)-(D)-(B)-(A)
③ (D)-(C)-(A)-(B) ④ (D)-(B)-(A)-(C)

【문20】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people ask me for advice about their personal problems, which they often do, I always try to give them an answer based on the Bible. The Bible is like a bottomless gold mine – the deeper we dig, the more riches we discover. And it says,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s,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We should ask ourselves : How much of our conversation has this as its intention?

- ① honesty ② affection
③ confidence ④ encouragement

【문2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punzel is a young lady who lives locked up in a castle, imprisoned by an old witch who continually tells her how ugly she is. One day, a handsome prince passes by the tower and tells Rapunzel of her loveliness. She lets down her golden locks, so he may climb her hair to rescue her. It is neither the castle nor the witch that has kept her a prisoner, but the belief in her own ugliness. When she recognizes her beauty, she sees that she can be set free.

- ① value of self-image ② importance of forgiveness
③ necessity of hardships ④ falsehood of fairy tales

【문2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ercise offers not just physical benefits but also other benefits.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between taking part in sports and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Leadership, responsibility, and team spirit are all positive qualities that usually result from regular exercise. For example, adolescents who exercise have more positive personality traits and social acceptance than those who do not exercise.

- ① 나이와 운동량과의 관계
- ② 운동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
- ③ 하루에 필요한 운동의 양
- ④ 운동이 줄 수 있는 신체적 이점

【문2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peeds have increased almost every year since the track opened in 1909.

Speed and excitement make the Indianapolis Motor Speedway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auto races. (①) Every Memorial Day weekend, thirty-three of the world's fastest cars compete in this 500-mile race. (②) The first winner, Ray Harrowiz, drove his Marmon Wasp an average speed of 74.59 miles per hour. (③) In 1990, Arie Luyendyk won in his Lola-Chevrolet with an average speed of 185.98. (④) Today the Indy Speedway draws 200,000 fans each year.

【문24】 다음 글에서 문맥상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large proportion of the news reports in most parts of the country are about crime or local and human interest stories. World affairs is often summarized only briefly in news broadcasts or newspapers. (A), there are weekly news magazines which cover world news in great detail. (B), there are specialized papers and magazines which offer detailed information on such topics as finance, politics, environmental concerns, etc.

- ① (A) Therefore (B) In addition
- ② (A) However (B) For example
- ③ (A) Therefore (B) For example
- ④ (A) However (B) In addition

【문25】 다음 글에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celebrate my birthday, my husband and I dressed up for an evening at the theater in town. We left our apartment to take the bus to town, but we didn't have the exact change. So my husband ducked into a shop to break a few dollars. As I waited, I was approached by a beggar. He held out his cup and said, "Lady, can you spare some change?" "No," I answered. "Actually, I'm waiting to get some change right now." Looking at me with surprise, he leaned forward confidently and said, "You've got to get a cup."

- ① pleasant ② embarrassed
- ③ sorrowful ④ relieved

2007년 3월 18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법원사무직렬】
 (제 2 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 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형 법(25문)	형사소송법(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7. 3. 19.(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7. 3. 19.(월) 10:00 ~ 2007. 3. 22.(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3. 30.(금)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민 법 25문】

【문 1】 다음 중 공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로 귀속한다.
-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 2】 유치권과 동산질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산질권자에게는 경매신청권이 있으나, 유치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이나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임에 비하여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 ④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질물이나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③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에정지를 점유하는 것도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있다.

【문 4】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 ②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③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소정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의무
- ④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의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문 5】 다음 중 실종선고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반증을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 6】 다음 중 부합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합유한다.
- ④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7】 다음 중 점유자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면 족하다.
-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통상의 필요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 ② 매도인의 대리인의 매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면하려는 제3자가 부담한다.

【문 9】 다음 중 불가분채무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
- ②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
- ③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
- ④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립된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

【문1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④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문11】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 연월일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은 유효하다.
- ②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니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③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2】 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 ③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는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문13】 다음 중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그 금전차용행위
- ② 부인이 종교단체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종교단체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 ③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
- ④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문14】 담보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토지,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유치권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 ③ 저당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건이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문15】 계약의 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6】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 ②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 ④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도 청산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문17】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문18】 다음 중 소멸시효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19】 다음 중 복대리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책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④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복대리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문20】 다음 중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 미성년자
-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1년 경과한 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 ④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던 자의 직계혈족

【문21】 재산상속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 ④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문22】 다음 중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한정승인이 있었던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문23】 다음 중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수목의 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24】 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그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뒤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책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 ③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부담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 ④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당시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25】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25문】

【문 1】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룬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문 2】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와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 ④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반복할 수 있다.

【문 3】 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제에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4】 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대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소의 취하는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 ④ 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문 5】 소송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③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 ④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6】 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 ④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문 7】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③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채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 ④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문 8】 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 9】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③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10】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문11】 다음 중 임의적 소송당당이 아닌 것은?

- ① 선정당사자
- ② 파산관재인
- ③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④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12】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②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③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13】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 ③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문14】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 ④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소의 제기과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문15】 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 ③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16】 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②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문1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 ②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 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 ④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문18】 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9】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 ②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 ③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 ④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문20】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보조참가인은 소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
- ③ 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④ 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이나 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문21】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 ②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 ③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 ④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22】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 ②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동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④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문23】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 전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한다.
- ②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③ 선정당사자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④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문24】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민사소송 신모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 ②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
- ③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 ④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양(止揚)

【문25】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③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형법 25문】

【문 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 ②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반소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소정의 음화판매죄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문 3】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 4】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치분 신청사건이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로 진행된 경우에도,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범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중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중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중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중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만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
- ②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 ②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모로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면, 생모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문 8】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④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문 9】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②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거래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예비·음모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방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문1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와 함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무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07조 제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그 객체로 삼고 있는바,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위조통화를 직접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여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수 있다.
- ②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문13】 다음은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담보채무의 소멸 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양도담보권자는 채권변제와는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1죄로 볼 수 없다.
- ②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어 2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문15】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공인(公印)위조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 등 다른 법률상 감경이나 가중을 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②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③ 3년 이상 20년 이하
- ④ 5년 이상 20년 이하

【문1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문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③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등기 경로 후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피해자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 ③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였을 뿐인 이상, 비록 그들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로서 그로 인하여 익사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문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비용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0】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1월 이상 2년 이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② 1월 이상 3년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 ③ 1월 이상 3년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④ 1월 이상 2년 이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문21】 범인은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③ 범인 자신은 범인도피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22】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③ 공범 중 1명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을 면제받으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을 면제받는다.
-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범행 후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문2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망자명으로 된 문서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날짜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명의자의 사망 이후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긴 방실의 문고리를 부수다가 발각되어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뿐만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문2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불었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한 이상,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④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로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에서 정한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25】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낙태범행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니 포괄적으로 낙태죄만을 구성할 뿐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③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분만 중의 태아를 업무상과실로 질식사케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5문】

【문 1】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 2】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
- ③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문 3】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 ②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후 형을 집행한다.
- ④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문 4】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②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 5】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③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문 6】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 ③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문 7】 공소장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 8】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②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고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 ④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간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문 9】 법원 기피신청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원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③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1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데, 이는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③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문11】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대리 및 보조,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무능력자 혹은 범인인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12】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②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④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3】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 ③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 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문14】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문15】 전문의 진술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6】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 등 몰수·추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문17】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18】 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문19】 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한다.
-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 ③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구금된다.
- ④ 검사가 제기한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직권 기타 구속취소청구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20】 긴급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③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문21】 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위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선서 후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④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2】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23】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 ②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2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 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②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거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문25】 증거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07년 3월 18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등기사무직렬】
 (제 2 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 법(25문)	민 사 소 송 법(25문)
	상 법(25문)	부 동 산 등 기 법(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7. 3. 19.(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7. 3. 19.(월) 10:00 ~ 2007. 3. 22.(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3. 30.(금)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상 법 25문】

【문 1】 우리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②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인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이다.
- ③ 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병용하여 상인이 양자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개인상인은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상법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문 2】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a.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b. 등기한 후에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호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는 상호권의 득상(得喪)을 대항하지 못한다.
- c.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 d.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e.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a, c, d ② a, d, e ③ b, c, d ④ c, d, e

【문 3】 다음 중 우리 상법상 허용되는 것은?

- ① 50%의 주식을 소유한 A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의 남편 C가 경영을 맡게 되었고 이후 3년 만에 회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C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위 회사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음).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D는 위 선택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 ③ 갑 주식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 ④ 을 주식회사는 1주의 액면가를 100원에서 50원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였다.

【문 4】 다음 소수주주권 중 그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수의 요건이 다른 하나는?

- 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권
- ② 총회소집청구권
- ③ 감사해임청구권
- ④ 회계장부열람권

【문 5】 다음은 각종 회사의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② 합자회사에서의 업무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만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이 원칙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 ④ 유한회사의 경우 의사기관인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그리고 감사기관인 감사가 필수기관이다.

【문 6】 X가 Y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X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도 Y가 주주가 된다.
- ② 그렇지만 위 ①의 경우 X와 Y는 연대하여 주금납입책임을 부담한다.
- ③ X가 납입책임을 면하기 위해 Y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④ Y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면 X가 주주가 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종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본이나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위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근자에 기술의 발달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 ③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시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문 8】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함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문 9】 다음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일부만을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10】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①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 ②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 및 C회사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 ③ A회사가 D회사 주식의 25%를 취득하였다면 지체 없이 D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A회사가 E회사 주식의 45%를 취득한 후 E회사가 A회사 주식의 15%를 취득하였다면 A회사는 E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E회사는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1】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 ② 이른바 ‘보증도(保證渡)’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이 송하인에 갈음하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송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 ④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문12】 다음은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설명으로만 짚지어진 것은?

- ㉠ 대표소송의 원고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피고는 책임의 추궁을 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약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문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자격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문14】 다음 중 각종 회사에서의 사원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원의 교체성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절대적 교체인 입사·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원의 교체가 가장 자유로운 회사는 유한회사이다.
-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사망이나 금치산은 당연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문15】 갑은 A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그 주식의 주주인 을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갑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회사도 갑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갑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실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16】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함이 원칙이다.
- ②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 ③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던 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문17】 다음 중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③ 영업의 폐지 ④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문18】 다음은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원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등기 이후에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 ②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로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회사로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문19】 다음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수종의 주식 중에서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하여야 한다.
- ④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감사의 책임면제(상법 제400조, 제415조)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동의도 필요하다.

【문20】 다음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사채권자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주주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문21】 다음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 ①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정관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④ 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22】 다음은 상법에 나타난 외관주의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1항)
- ②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제1항)
- ④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5조)

【문23】 다음은 지배인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지배인은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 ②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중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 ③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 ④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4】 다음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회사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법 및 상속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③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④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25】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 ①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제58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 ②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채무가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 ③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상인과 비상인간에는 약정할 수 없다.
- ④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한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란 이른바 프랜차이즈(franchise) 영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 ①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 이전청구권
- ②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
- ③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④ 유언자가 사망한 후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문 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②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입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중증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중증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4】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④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주소증명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④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문 6】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 ②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 ④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나 현재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문 7】 다음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위 ①에서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위 ③에서 그 가처분 이후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8】 등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전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9】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며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된다.
- ②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가 아닌 판결서,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④ 거래가액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므로,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문10】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저장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장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나,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어서 수리할 수 있다.
- ④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11】 다음 중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고르면?

- | |
|--|
|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
|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
|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문12】 다음 중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은?

- ① 지적법 제5조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
- ② 도로법상의 도로
- ③ 독립된 건물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노인정
- ④ 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

【문13】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한다.
- ②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기등기의 건물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지 된 때에도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14】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15】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는 때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 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의 소유권보존등기
- ④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경우 소유권등기의 말소

【문16】 등기소에 비치할 다음 장부 중 영구보존장부가 아닌 것은?

- ① 폐쇄등기부
- ② 멸실된 건물의 도면
- ③ 말소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
- ④ 폐쇄된 공장저당목록편철장

【문17】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의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고, 나중에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③ 등기신청이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며 서면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관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8】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 ④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9】 다음 중 신청서부분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부(父)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등기신청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갑·을·병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그 공유지분을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갑·을과 정이 작성하였으나 갑만이 위 계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그 지분 10분의 6 전부를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중 10분의 2에 대하여만 신청한 경우

【문20】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21】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 ③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있다.
- ④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22】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 공익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그 법인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③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④ 중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중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문23】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 ② 관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도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된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문24】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지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한 때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때이다.
- ③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 ④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문25】 다음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을 통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관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 ④ 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